

관세청, 패션봉제업계 간담회 개최... “국산둔갑 근절로 국내 제조업 지킨다”

- 범정부 의류 라벨같이 단속 결과 공유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
- 중앙정부-지자체-민간 협력 단속모델 전국 확대 추진

관세청(청장 이종욱)은 7월 10일(금) 서울시 종로구 소재 종로패션종합지원센터에서 지역 패션봉제업체 대표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.

이번 간담회는 관세청 주관으로 올 2월부터 100일간 실시한 「범정부 의류 라벨같이 합동단속*」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라벨같이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인 봉제업체와 직접 나누기 위한 현장 소통의 자리로 마련되었다.

* (참여) 관세청, 공정거래위원회, 조달청, 경찰청, 서울시 (기간) '26.2.9.~5.19., 100일

이 자리에서 관세청은 의류 라벨같이 단속 결과*와 주요 적발 사례** 및 위반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 등 결과를 업계에 설명하는 한편, ‘라벨같이 신고센터’ 구축 등 지속적·상시적 단속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.

* 총 193개 업체, 416억원 상당 원산지표시 위반 의류 등 적발

** 근무복·의류·잡화 등을 국산으로 라벨같이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, 백화점·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업체, 외국산 직물 국산가장 수출 업체 등 적발

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한성화 이사장은 “이번에 관세청에서 의류 라벨같이 근절을 위해 단속에 힘써주신 점 감사드린다”며,

“앞으로도 온라인플랫폼 판매 의류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단속 사각지대 해소와 라벨같이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전담팀 운영,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 등 관세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온라인 원산지표시 관리체계 마련 등 법령 및 제도의 보완을 추진하는 한편, ‘라벨같이 신고센터’ 구축 등을 통해 상시 단속 및 감시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
이종욱 관세청장은 “K-패션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할 것”이라고 강조하면서,

“이번 라벨같이 단속을 계기삼아 올 하반기에는 저가 수입품의 국산둔갑으로 고사위기에 있는 우리 제조산업 보호를 위해 지역별 특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국산둔갑 특별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	책임자	과 장	윤지혜 (042-481-7880)
		담당자	사무관	김영순 (042-481-7742)

